

‘불안한 배심원제’ 공정성 보장되나

민주 광주·전남 도입 앞두고 논란 확산 정치적 편향·표심 왜곡 가능성도 문제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및 광주·전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배심원단 구성 규모 및 비율, 표심 왜곡 방지 대책, 배심원단 이동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안정적 운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정당 정치 및 책임 정치와 어긋난다는 것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보완이 시급한 문제점을 조망해 본다.

◇배심원 회유 가능성=경선 및 컷-오프 3일 전에 배심원을 선정함에 따라 회유 및 매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능 출제요원처럼 철저하게 격리되지 않는 이상 학연·지역·혈연 등 복잡하게 얽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일부 후보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배심원단의 표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적 관계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3일 동안이나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지역적 특성상 일부 배심원 명단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를 방지하기 위

해 배심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며 후보 및 대리인의 배심원 접촉을 금지하고, 배심원 선정이 알려지거나 알린 사람은 배심원단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도로 배심원에 대한 회유를 막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일각에서는 중앙 배심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거론하고 있다. 선거법상 최소한의 경비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업 등을 포기하고 타지역에 가서 경

선에 참여할 정도면 특정 정치적 성향이 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도 보다는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진영 인사들이 중앙배심원단에 대해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상당하다.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은 “기존의 경선 제도를 보완해 성공적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외부 인사가 특정 정당과 특정 지역의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중앙배심원단은 200여명에 이르는 각 직능단체와의 정치 협약을 통해 정해지며 정치적 스펙트럼도 중도보수에서 진보까지 아우르고 있어 배심원단의 정치적 성향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배심원 규모 및 기타=지역 100명, 전국

100명 등 총 20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 규모는 광주시장 후보를 선출하기에는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중앙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배심원단 숫자를 500명 정도로 늘릴 수 있지만 현실화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배심원단에 부여되는 1인2표제도 문제다.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 후보자가 3위로 추락할 수 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중앙배심원단의 이동과 배심원단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도 문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본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부정적으로만 보면 도입이 힘들어진다”며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순기능과 혁신적 공천을 광주에서 시작한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지역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정치운동 모임 ‘희망과 대안’은 22일 오전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민주당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광역의원 3분의 1 무공천해야”

선거구제 분할 시민단체 반발...강박원 시의회의장 “시민에 죄송”

광주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 분할 강행처리에 따른 후폭풍을 거세게 맞고 있다. ‘당론’에 따라 경찰력까지 동원해 강행처리했지만,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반대 입장을 밝혀 당 지도부와 잇박자 행보를 보인데다 설상가상 시민단체가 민주당 광역의원 선거구의 ‘3분의 1’ 무공천을 주장하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강박원 시의회의장은 선거구 분할 강행 처리와 관련 “시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로 결성된 ‘광주 희망과 대안’은 22일 “민주당은 광주·전남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의 3분의 1을 무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광주에서 시장과 5개 구

청장, 광역의원 의원 19명 전원을 모두 차지하고 있고, 기초의회 선거에서 4인 선거구를 없애버려 소수세력의 의회진출과 민주당 독점구조도 시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정치구도에서는 2010 지자체 선거에서도 민주당 독식구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역의회에서 견제와 균형을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 중 최소한 3분의 1은 비 민주당 출신 정치세력에게 할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에 호남지역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과 정당화를 위한 비전 제시를 요구했다. 최근 광주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2인 선거구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경찰력을 동원하는 폭거를 저행했다”며 “민주당의 이런 탐욕적 행태에 실망을 금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4인 선거구 분할 강행처리에 대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지방자치 자율권 침해라는 점에서 중앙당의 개입은 없었으며,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중앙당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지지했다”면서 “4인 선거구 분할은 특별히 이익될 것도 없는 데 그걸 밀어붙이겠느냐?”라고 역을 함을 호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관광레저타운 “글쎄요”

광주시장 입지자들 신중한 접근 주문

광주시가 서구 서창동 일대에 330만㎡ 규모의 관광레저복합타운을 조성키로 한데 대해 광주시장에 비호자들이 22일 잇따라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추진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 제2의 돌고래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광육성추진위원회 회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 아이디어 공모단계에서부터 민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채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관광레저복합단지 기본 구상은 광주를 서남권 문화관광의 허브도시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엿보이지만,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제2의 돌고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광주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관광레저복합단지 사업 중 국제민속음식촌, 공예산업러스터, 오페라하우스 등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동구 아시아음식 문화거리 및 예술인공방거리, 남구 향토공예 체험거리 등과 중복된다”며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또 “관광레저복합단지가 들어서는 서구 서창동 211번지 일대 건너편 200만㎡의 방대한 땅은 공군에서 새로운 탄약고 이전부지로 추진하고 있고, 현 군사공원이 존재하는 한 소용골해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일 예비후보는 “광주시가 관

관광레저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 2조 원에 4천여 명의 민간투자가 집중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도심 공동화 현상과 도시개발의 기형화를 가중시킬 우려가 많다”고 주장했다. 양 후보는 이어 “광주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광주시 발전을 위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먼저 만들고, 이후 구체적인 뉴타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갑길 예비후보도 “먼저 시민들의 뜻을 모으고 철저히 검증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찬용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관광레저복합타운 조성 사업 발표는 현대 거버넌스 행정의 필수과정인 시민과의 소통이 없고, 광주 미래상과의 연관대체도 세울 수 없고, 실패로 끝나도 책임지지 않는 소위 무소통, 무대책, 무책임 시정운영이라 할 수 있다”면서 “시민에게 먼저 제안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강은태·이용섭 의원 등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시민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나주 혁신도시와 광주를 잇는 중간 지점에 대규모 관광레저복합타운 건설이 꼭 필요하다”며 “이제 논의를 시작할 만큼 다양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해 차세대 성장거점으로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서구 서창동 211번지 일대 330만㎡에 총사업비 2조 원을 들여 국제민속음식촌, 공예클러스터, 워터파크,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상품단지 및 교육·의료서비스 단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관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밝혔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위원장 이미경...민주 지방선거공천심사위 구성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미경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6.2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공심위는 오영식 전 의원을 간사로 해 모두 15명으로 이뤄졌으며 광역단체장 후보 심사를 맡는다. 또 16개 시도 당에서 공천이 이뤄지는 기초단체장 후

보에 대해서도 경선 탈락 후보자의 재심 요청시 심사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상우 대변인은 “중앙당 공심위 구성을 계기로 지방선거후보자 공천일정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advertisement for hair care products. Includes text: '돌핀치, 파코엔, 세아나 각종 도입형 행사 (300% 판매)', '소포(비품) : 800원, 1200원, 1400원, 1600원', '대포(비품) : 5000원, 6000원, 10000원', and phone number 082-671-1199.

Health and fitness advertisement for 'Helsking' (헬스킹). Features a man holding a product and text: '대인민족 대표 건강신발', '헬스킹 기능화', '신발이 아니라 과학품 (안다!)', 'Product Competition', and '민주 헬스킹코리아'.